

# 6월은 「해외금융계좌 신고」의 달입니다

— 국세청, 2022. 6

- (신고안내)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 자산을 양성화하고 세부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'1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  -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'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, 계좌번호,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(신고지원) 홈택스와 모바일(손택스)로 신고할 수 있으며, 올해부터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- 또한, 이번 신고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-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(☎126→2→6)를 이용하기 바랍니다.
- (신고검증) 국세청(청장 김대지)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  - 해외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, 형사처벌,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.

## I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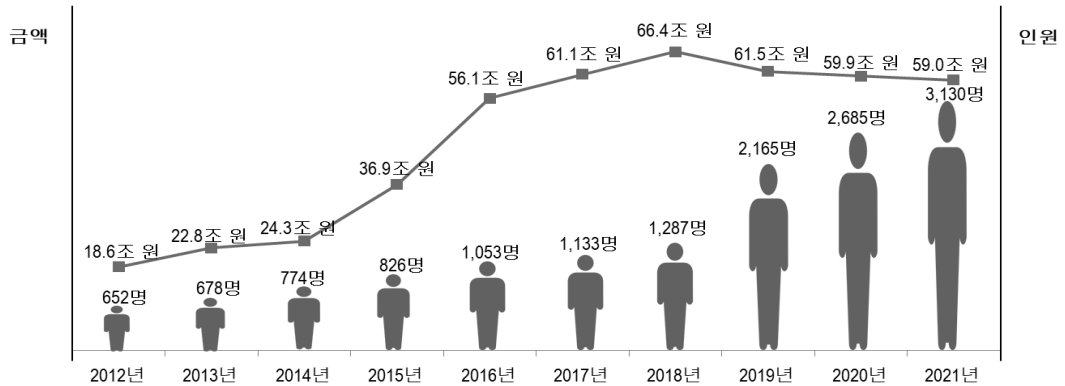
### 1. 제도 도입 및 정착

-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, 역외세원 양성화,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

고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.

- 우리나라도 '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되어, 신고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.

《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》



## 2. 제도 개선

- 신고기준금액 인하,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,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.
- 또한 계좌 미(과소)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, 수정·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여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




## II 2022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안내

### 1. 신고의무자

- ('21년 보유계좌 신고)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'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계좌정보\*를 6. 30.까지 신고해야 합니다.
- \* 보유자의 성명·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, 계좌번호, 해외금융회사 등의 이름,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, 관련자 정보 등
-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, 내국법인은 본점,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.
- － '21. 12. 31. 기준으로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, 1년 전부터 국내거소기간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은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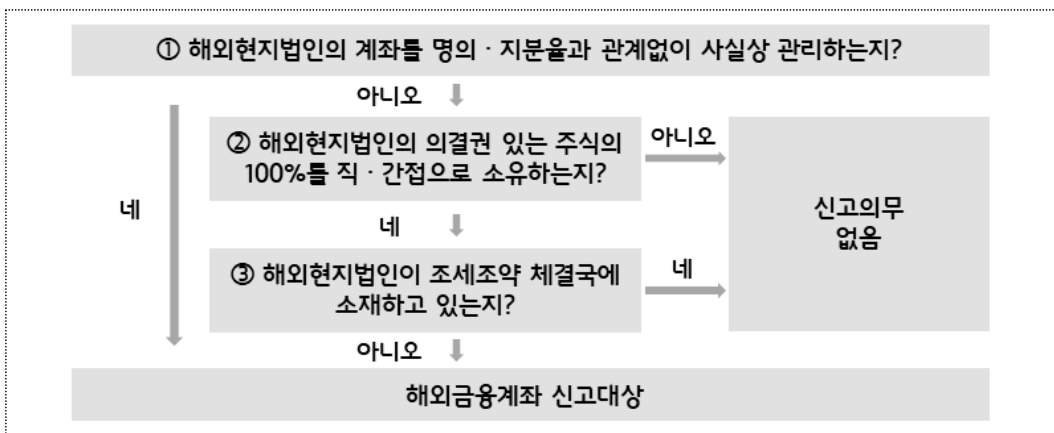


## 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요약 】
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고의무자	 Dec. 31	'21. 12. 31.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고의무 면제자		외국인 거주자 ➡ '12~'21년 동안 국내거주기간 5년 이하 재외국민 ➡ '21년 동안 국내거소기간 183일 이하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고기준금액		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계좌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신고기한		'22. 6. 30. 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

- (현지법인 계좌 신고)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율이나 현지법인 소재지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현지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이때 실질적 소유자는 계좌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·배당 등의 수익을 획득하거나 계좌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  -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·간접적으로 100% 소유한 경우,
    - 해당 현지법인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그 현지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  - 그 밖에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사업장(지점) 또는 연락사무소 명의로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 【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단 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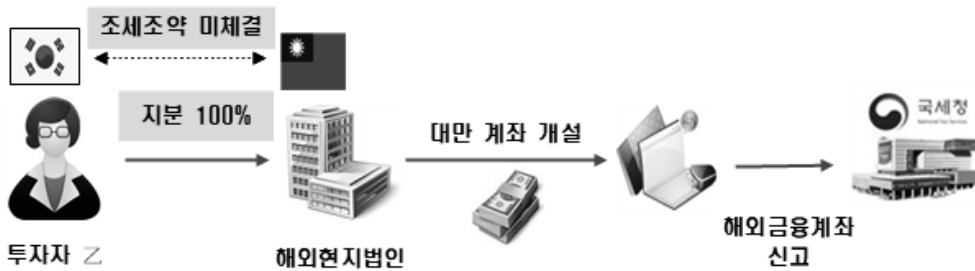
【 해외현지법인 계좌 신고의무 판정 요령 】

① 해외현지법인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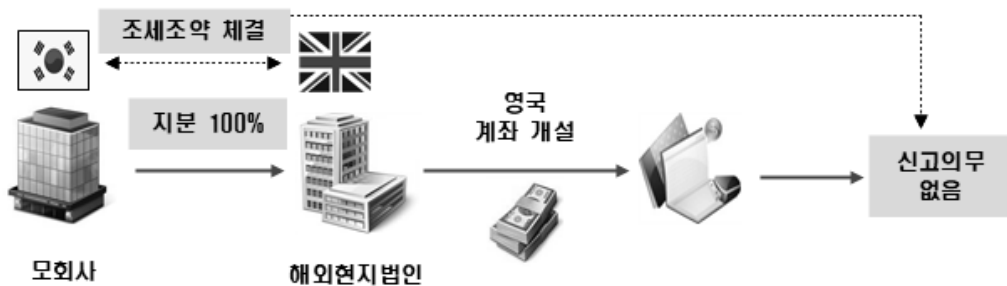
⇒ 甲이 조세조약 체결국인 미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의 지분율이 10%라도 미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의 실질 소유자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

②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%,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경우



⇒ 乙이 조세조약 미체결국인 대만에 지분 100%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, 乙은 대만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

③ 해외현지법인 지분 100%, 조세조약 체결국인 경우



⇒ 국내 모회사가 영국에 지분 100%인 해외현지법인을 소유한 경우 영국이 조세조약 체결국이므로 국내 모회사는 영국 현지법인 명의 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없음



- (공동명의계좌 등 신고)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 공동명의자,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- 다만, 위 신고의무자 중 다른 신고의무자가 관련자 정보를 제출함에 따라 과세당국이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.
  - 한편,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 등의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(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)
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
4.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

- (해외체류자 계좌신고) 국외 근무 중인 공무원,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% 지분을 보유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·직원은 해외 체류 중이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며,
- 해외 유학생, 해외 근로자 등 그 밖의 해외 체류자의 경우, 국내 가족이나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

## 2. 신고대상

- (금융자산 신고)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, 계좌에 보유한 현금, 주식, 채권, 집합투자증권,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\*이 신고대상입니다.
- \*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, '23년 6월부터 신고대상임
  - 해외금융회사\*에는 우리나라 은행·증권회사 등의 해외지점은 포함되지만, 외국계 은행 등의 국내 지점은 제외됩니다.
  - \* 금융업, 보험·연금업, 금융·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
  -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,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연도 중 보유한 모든 계좌를 말합니다.
- (계좌 관련자 신고)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또는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, 본인 이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\* 정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\* 계좌 명의자, 실질적 소유자, 공동명의자

신고대상 연도 년		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		신고인 유형	[ ] 거 주 자
					[ ] 내국법인
			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
관련자 일련 번호 ( )	보유계좌 일련번호		계좌 관련자 유형	[ ] 유형1 [ ] 유형2 [ ] 유형3 [ ] 유형4	
	관련자 정보	성명 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
		주소 (소재지)		전화번호	

- ☐ (국외소득·재산 신고)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산으로부터 발생된 이자·배당소득,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및 증여받은 국외재산을 해외금융계좌로 보유하는 경우 관련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# 3. 신고방법

- 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'22. 6. 30. (목)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\*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.
- \* (경로) 국세법령정보시스템 > 별표·서식 > 법령서식 > 국제조세 > 45번 서식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와 손택스(모바일)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\*할 수 있습니다.
- \* (경로) 홈택스·손택스 > 신고/납부 > 일반신고 > 해외금융계좌 신고
- ☐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손택스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계된 환율조회 사이트를 통해 환율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또한, 이번 신고부터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이 발송되며, 간단한 본인인증으로 안내문 확인이 가능합니다.
-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안내책자와 국세상담센터(☎126 → 2 → 6)를 이용하기 바랍니다.



##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유의 사항

## 1. 보유계좌의 월말잔액 산정

-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구하기 위하여, 계좌에 보유한 자산 종류별 금액을 산정하고, 그 산정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\*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합니다.

\*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

- 만일,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\*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합니다.

\* 공동명의의 계좌의 경우에는 계좌잔액 전부를 합산(지분액 합산 아님)

## 【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】

자 산	산출방법
현금	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
상장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상장채권	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×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(해당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)
집합투자증권	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×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(해당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)
해외보험상품	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
위 이외의 자산	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× 매월 말일의 시가(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)

## 2. 신고기준금액 산정

-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\*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을 신고기준일로 보아, 그 기준일 현재 보유한 계좌 잔액 합계액을 신고합니다.

\*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

- 아래 사례에서, '21년 보유한 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이 2월(8억 원), 5월(7억 원), 8월(6억 원)이고,  
- 그 중 합계잔액이 가장 큰 달은 2월이므로, 2월 말 현재 (신고기준일) 보유한 A(3억 원) · B(1억 원) · D(4억 원) 각 계좌 잔액과 합계액(8억 원)을 신고하여야 합니다.  
- 기준일(2월 말) 이후 5월에 개설한 C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
【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계산 사례 】

(단위 : 억 원)

기준일 계좌	1/31	2/28	3/31	4/30	5/31	6/30	7/31	8/31	9/30	10/31	11/30	12/31
A계좌 잔액 (예금)	1	3	1	2	2	-	-	2	4	2	1	1
B계좌 잔액 (상장주식)	2	1	1	1	1	-	-	-	-	1	2	1
C계좌 잔액 (보험)	계좌 미개설				1	2	2	4	-	1	-	1
D계좌 잔액 (채권)	1	4	1	1	3	1	계좌 해지					
합계	4	8	3	4	7	3	2	6	4	4	3	3

#### IV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

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, 형사고발, 명단공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엄정 집행하고 있습니다.

##### 1. 과태료 부과

- ☐ 신고대상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(과소) 신고한 경우 미(과소) 신고 금액의 최대 20%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【 미(과소)신고 과태료 】

미(과소)신고 금액	과태료
20억 원 이하	해당금액 × 10%
20억 원 ~ 50억 원	2억 원 + 20억 원 초과금액 × 15%
50억 원 초과	MIN(6.5억 원 + 50억 원 초과금액 × 20%, 20억 원)

- 아울러 신고의무자가 미(과소) 신고 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소명한 경우, 미(과소) 신고 과태료 이외 미(거짓)소명 금액의 20%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.





## 2.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

- 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\*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.

\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%~20% 벌금(징역·벌금형 병과 가능)

- 국세청은 '21년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75명을 형사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습니다.

### V

####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·기한 후 신고에 대한 혜택

- ☐ 신고기한 이후 미(과소)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(과소)신고 금액의 90%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, 명단공개 대상\*에서 제외됩니다.

\*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

- 다만, 미(과소)신고 계좌 보유자가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, 자발적으로 수정·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#### 【 기한 후·수정 신고 시 과태료 감경률 】

기한 후 신고 시점	수정신고 시점	과태료 감경률
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	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	90%
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	신고기한 후 1년 이내	70%
신고기한 후 1년 이내	신고기한 후 2년 이내	50%
신고기한 후 2년 이내	신고기한 후 4년 이내	30%

### VI

#### 해외금융계좌 제보 안내

- ☐ (제보 포상금)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#### 【 해외금융계좌 제보 포상금 】

과태료 납부액 또는 벌금액	포상금 지급률
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	100분의 15
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	3천만 원 + 2억 원 초과금액 × 100분의 10
5억 원 초과	MIN(6천만 원 + 5억 원 초과금액 × 100분의 5, 20억 원)

- (제보 방법)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(126번) 또는 국세청 홈택스(www.nts.go.kr)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·전화·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.

## VII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검증

- 국세청은 국가간 금융정보교환자료, 외국환 거래자료, 유관기관 통보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뿐만 아니라 역외탈세혐의 검증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.
  - 지난해 말 해외 부동산정보·법인현황·소득자료를 납세자별로 관리하는 「국의 소득·자산 통합관리시스템」을 구축하였으며,
    - 올해는 이를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의 국외 소득·자산 신고내역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.
- 최근 연소자의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늘고 있어, 소득활동이 없거나 자력으로 해외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소자에 대해 올해 처음 역외탈세 여부를 검증하였으며,
  - 공정과 원칙에 반하여 해외부동산 취득 및 양도 신고 누락,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과 관련하여 소득세, 증여세,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에 대하여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국세청은 역외 자산소득 양성화, 공정성 제고라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목적이 제대로 달성되도록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관련 제세 탈루에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.
  -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'해외금융계좌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'이라는 상식을 유념하여 해당계좌를 성실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합니다.



## 붙임 1 -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및 역외탈세 혐의 적발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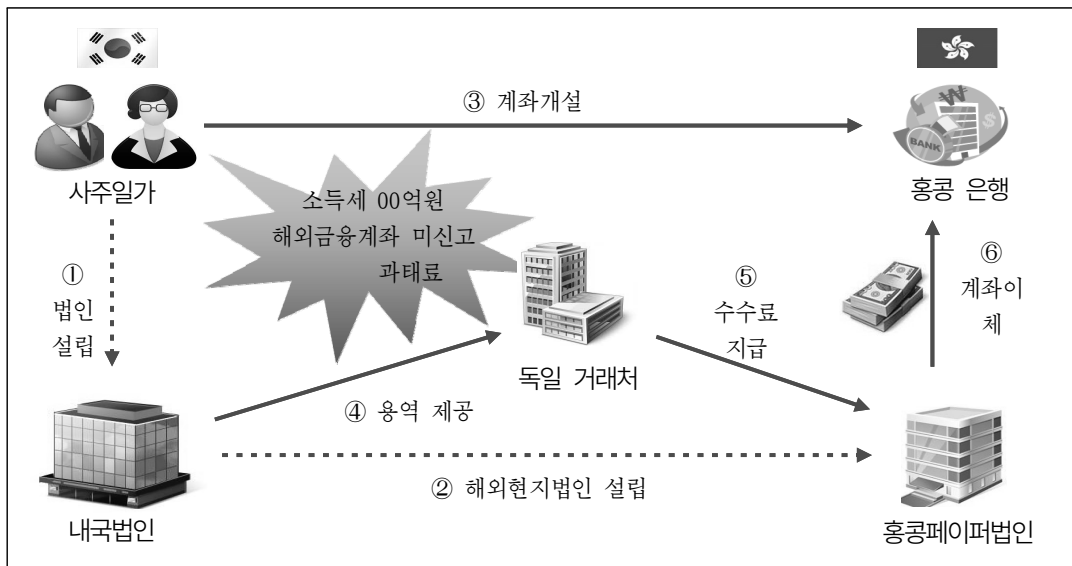
**사례 1** 사주일가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우회 수취한 거래처 알선 수수료 신고누락 적발

## □ 인적사항

○ 성 명 : ○ ○ ○, ◆◆◆

○ 주소지 : ○○시

## □ 주요 적발상황



- 사주일가는 본인이 소유한 내국법인이 독일 거래처로부터 받고 있는 알선수수료 00억 원을 미신고된 홍콩 명목상 회사 계좌로 수령한 후 사주일가의 홍콩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은닉
- 금융정보 교환을 통해 사주일가의 미신고 해외계좌 및 금융자산 적발

## □ 조치사항

- 사주일가에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과 알선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추징

## 사례 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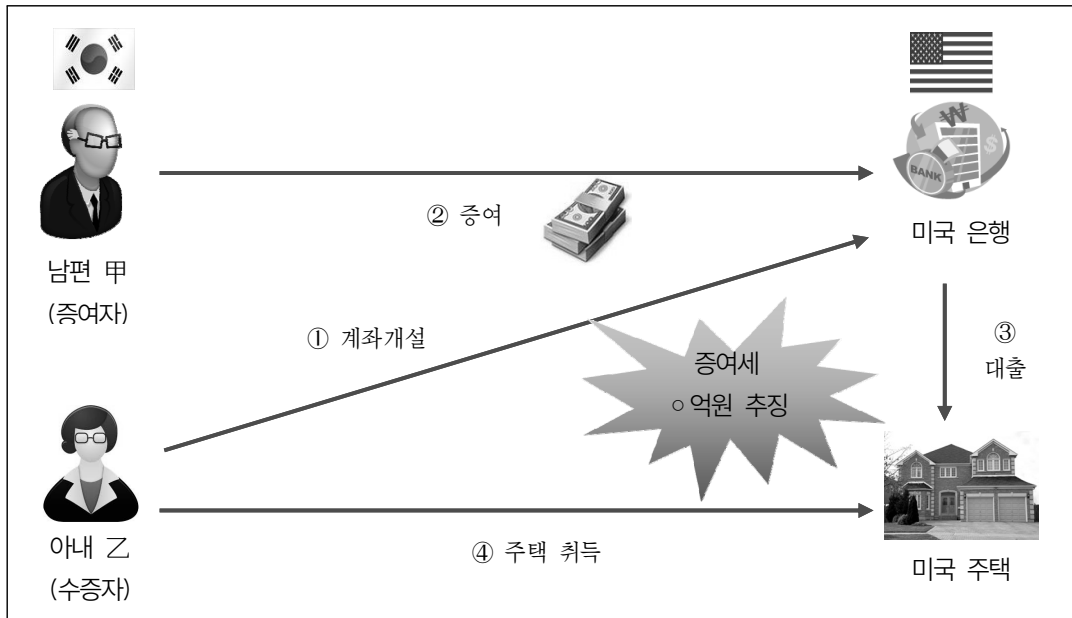
해외금융계좌를 통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부동산 취득자금 확인  
및 증여세 신고 누락 적발

### □ 인적사항

○ 성 명 : ○ ○ ○

○ 주소지 : ○ ○ ○ 시

### □ 주요 적발상황



- 아내 乙은 미국에 계좌를 개설한 후 남편 甲이 증여한 00억 원과 미국 은행에서 대출받은 0억 원을 합하여 미국 주택 취득
- 乙은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였으나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신고 누락

### □ 조치사항

- 乙이 甲으로부터 증여받은 00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 0억 원 추징



## 사례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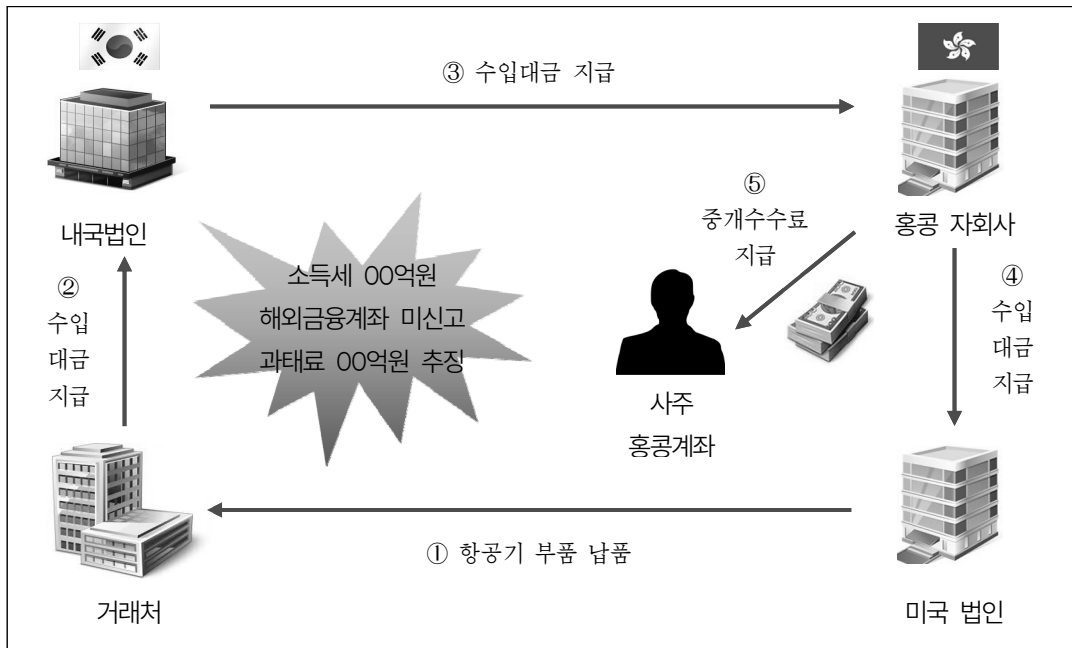
### 사주의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로 수취한 해외현지법인 지급 중개수수료 은닉 적발

## □ 인적사항

○ 성명 : ■■■■

○ 주소지 : ○○시

## □ 주요 적발상황



- 사주의 내국법인은 미국, 이스라엘 및 폴란드 군수장비업체로부터 군수품을 수입하여 공군 부대에 납품하는 업체임
- 사주는 홍콩 자회사에 무기 중개용역을 제공한 후 홍콩 계좌로 중개수수료 00억 원을 받았으나 해당 홍콩 계좌 및 소득세 신고누락

## □ 조치사항

- 사주에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00억 원, 중개수수료 신고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00억 원 추징

## 붙임 2 - 자주 묻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사항(문답)

### 1. 2021년 6월에 이미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1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었더라도 2022년 6월에 신고해야 하나요?

- 2021년에 신고한 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2년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
### 2.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 가족의 해외금융계좌잔액의 매월 말 잔액을 합산하여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?

-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여부는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판단하므로, 원칙적으로 부부, 직계존비속 등 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.

### 3. 아버지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해외금융계좌(A, B계좌) 중 A계좌는 아버지, B계좌는 아들 명의로 개설되어 있고, 5월 말 계좌 잔액이 A계좌 4억 원, B계좌 2억 원인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나요?

- 아버지는 A, B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5월 말 현재 계좌 잔액 합계액이 6억 원으로 기준 금액인 5억 원을 초과하므로 A, B계좌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, 아들을 B계좌에 대한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
- 아들은 자기 명의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 미만이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.
  - \* 만일 B계좌의 잔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명의자인 아들에게 B계좌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며, 아버지를 관련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아버지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B계좌를 신고하면서 아들을 관련자로 신고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.

### 4. 잔액이 8억 원인 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데, 지분율이 각각 50%입니다.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이 5억 원 이하가 되는데,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?

- 공동명 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 의자 모두가 잔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- 다만, 공동명 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 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 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 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.

## 5.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는 신고 대상인가요?

-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.

## 6. 우리나라 투자자가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되나요?

- 우리나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에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

## 7.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?

-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2023년 6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
## 8. 해외금융계좌의 외화금액을 어떻게 환산하여 신고하나요?

-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매월 말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했을 때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의 금액을 신고합니다.
-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합니다.
- \*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([www.smbs.biz](http://www.smbs.biz)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## 9.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0% 보유한 내국법인(또는 거주자)은 그 외국법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?

-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사실상 관리하는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분을 및 조세조약 체결여부 등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입니다.

### 10.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?

-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에 해당된다면 관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.

### 11. 여러 연도에 걸쳐 동일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한 경우 과태료는 연도별로 부과되는지 아니면 1회만 부과되는지요?

-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연도마다 부과되며, 연속하여 여러 연도에 걸쳐 신고누락 하였다면 각 연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### 12. 차명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?

-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 따라서,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- 다만, 명의자나 실소유자 중 어느 한 명이 보유계좌정보를 신고함에 따라 다른 자가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.

### 13. 미국 영주권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?

- 미국 영주권자라도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. 다만,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.

## 붙임 3 - 거주자 판정기준

- 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,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,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





(주소)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

(거소)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

□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기준 및 관련 법령

1. 주소로 판정(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주소를 가진 경우는 거주자)	법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</li> <li>-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</li> <li>-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봄</li> <li>-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과 해외현지법인*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</li> </ul> </li> <li>*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소령\$2③</li> <li>◦ 소령\$2⑤</li> <li>◦ 소령\$3</li> </ul>
2. 거소로 판정(체류기간 충족만으로 거주자에 해당)	법령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*인 경우</li> <li>* 183일 연속으로 거주할 필요는 없음</li> <li>-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관광, 치료 등 출국 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소법\$1-2①</li> <li>◦ 소령\$4②</li> </ul>

※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(소령 § 2①)

※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

## 붙임 4 -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

### □ 제도 개요

-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

### □ 지급요건 및 지급액

-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'중요한 자료'의 의미
  - 해외금융기관 명칭, 계좌번호, 계좌 잔액, 계좌 명의자 등 해외금융계좌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
    - \* 예) 해외금융계좌 사본,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
- 포상금 지급액: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~15%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

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	포상금 지급률
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	100분의 15
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	3천만 원 +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
5억 원 초과	6천만 원 +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

- \* 탈세제보 포상금(40억 원 한도),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(20억 원 한도)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
- \*\* 과태료 금액이 납부되고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(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)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

### □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

- 국세청 홈택스\*, 전화,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
  - \* 「국세청 홈택스, 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」 → 「상담/제보」 → 「탈세제보」 → 「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」
-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(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 제5항)